

#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으로 국가 대도약 출발점 삼아야”

## 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사법개혁, 노동분야 관행 문제 언급  
정치개입 종교단체 해산 조치 주문  
공정위 강제조사 권한여부 등 질문  
산불 책임소재, 소방법 준수 점검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특히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인 상식과 원칙을 토대로 주권자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내란재판부와 법외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전체 개혁안의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문제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등 노동 분야 관행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에게 최

저임금 주는 걸 당연시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하는 데 정부가 앞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정부는 돈을

아끼는 곳이 아니라 ‘잘 쓰는’ 의무가 있는 조직인 만큼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단체의 해산문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헌법·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있는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비공개회의에선 경제제재 현실화 방안과 산불 대책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

원장에게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실효성 등이 있는지도 물었다.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에 대해선 초기 책임 소재지가 산림청인지 지자체인지 행안부 소관 소방청인지 물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으며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에 대해서도 “대피로 확보 등 소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경우 국민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K-푸드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며 “내수를 넘어 전락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관계 부처에 해외 마케팅과 관광 연계 상품 개발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野, ‘8대 악법’ 필리버스터 예고… 與 “민생지원 지연”

野, 가맹사업법 개정 필리버스터 실시  
국민에게 반대 이유 전달 목적으로 진행  
與 “민생 발목잡기 넘어 민생 탄압”

국민의힘이 9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외곡죄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한 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강력한 대역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민생 법안도 국민의힘이 불모로 잡아 민생 지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피켓시위’를 하며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가 만나 회동을 했지만 본회의의 상정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외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생외면, 국회파행’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 권한 확대)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포기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대응 전략을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따른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처리한 후 상정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개정안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

행 방해)를 신청해 나경원 국민의힘이 첫 주자로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9일 자정에 정기국회가 자동 종료돼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추후 임시회를 여는 문제를 여당과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의 관한 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 야당이 동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가맹사업자가 적은 부분에서까지 일률적으로 노동쟁의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정부위에서 합의가 못됐고(프레스트트랙을 거쳐) 법사위로 갔다”며 “의원들께선 사법과 5대 악법과 국민입찰 3대 악법 등 8대 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없는데, 법안을 처리하면 왜 국민에게 반대하는지 알려드릴 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비정점법안 처리에 앞서 지연전

략을 펼치는 이유를 설명했다.

문규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후에 “(12월 임시회 개최 후) 다음 본회의가 11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때 가맹사업법을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11~14일까지 본회의를 하게 되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원하는 법안 3개 정도 올려서 꼭 통과시키는 전략인데, 어떤 법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선 확정이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등 소수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입장 전 의원들을 모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민생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마라”며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맞나”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

## 을지로위원회, 대·중소기업 기술분쟁 중재로 상생협약 이끌어

한화-에스케이이노테크 상생협약식  
10여년간 기술분쟁 민사소송 이어와  
법적 분쟁 멈추고 신뢰회복 약속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기술분쟁 민사소송의 대표적 사례였던 에스케이이노테크와 한화 양사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김남근·이병진 의원과 류두형 한화 글로벌 부문

대표이사, 전장수 한화 상무, 장태관 재단법인 경청 이사장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 협약식’을 열었다.

한화의 협력업체였던 에스케이이노테크는 지난 201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화가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기술자료를 유용했다며 신고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았고, 10여년 간 분쟁을 이어왔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1년 1심 판결을 뒤집고 한화의 기술유용 행위를 인정해 에스케이이노테크 측에 기

술유용 배상액 5억원과 징벌적 배상 2배를 적용해 10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판결했다. 하도급법에 따른 징벌적 배상을 2배까지 적용한 첫 사례였다.

하지만, 9일 양사는 법적 분쟁을 멈추고 상생협약식으로 신뢰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술은 기업의 미래이자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의 개발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기업 당사자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생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상생협력 협약은 양사의 결단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가 함께 만들어진 쾌거”라고 표현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2015년부터 계속돼 온 기술 분쟁은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됐고 산업 생태계에 깊은 불신을 남겼다”며 “그 어려운 시간을 끝내고 상생협력을 위해 나가겠다는 양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모든 분쟁을 일괄 종결하고 양사 상호 건전한 거래와 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민위원장은 “처히 을지로위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 일감 몰아주기는 특히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조만간 해를 넘기기 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최초로 입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입법이 된다면 법원에서 기술 분쟁과 관련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제도만으로 충분치 않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기술과 네트워크 등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는 체질을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태홍 기자